



2011.12.15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기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 〈국방선진화연구회원 명단〉 (가나다순)

김무일 김병관 김병기 김영인 김종민  
김종하 김태교 김태준 남대연 노양규  
박휘락 소이원 신도철 안희수 윤상주  
엄영호 이영계 이원우 이창형 임치규  
정경영 정지용 조기형 한성주

본 자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브리핑자료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재단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07년 2월 23일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그 시행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해둔 상태이다.

그 이후에도 한국의 안보상황은 계속하여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2009년 두 번째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고,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했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 한국은 효과적인 방어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휴전 이후 발생한 어떤 상황보다 더 심각한 안보위협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데도 합의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재검토 없이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보장에 필수적인 존재로 기능해온 한미 양국의 단일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기 어렵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연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차기 정부의 임기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범과 즈음하여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층 깊게 검토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이를 통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과 자주성의 회복,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강화,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 자체가 국가안보의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자주성이라는 명분에 치중하여 내려졌다는

점에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사불란한 전쟁수행, 충분한 미 증원군의 보장에 관한 사항, 전·평시 효과적 연계의 곤란성, 유엔군사령부의 위상 혼란과 지원 병력의 문제 등 다양한 위험을 현실성 있게 고려하여 분석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결론을 통하여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추진의 이점과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력 여부와 연계시킴으로써 불안감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미동맹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외교를 다변화함으로써 한미연합사령부가 잔존하는 상태에서도 국민들의 자존심이 손상받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무관하게 핵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과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 〈본 문〉

**문제의 제기:** 한국의 노무현 행정부는 2003년 출범과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전시에 한국군에 대하여 작전통제권(Authority of Operational Control)을 행사하는 현재의 체제가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게 이의 “환수”를<sup>1)</sup>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대하여 최초로 미군은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당시 미 국방장관이 예상 외로 수용해버리자<sup>2)</sup>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1) 미군이 사용하는 transfer와의 통일을 위하여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양된 것을 찾아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수라는 용어가 타당하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국 주도(supported)”와 “미국지원(supporting)”의 관계에 의하여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에 미군의 한국사령부(Korea Command)를 새로 설치하여 한국 합참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키고 46명의 한국해군을 사망하게 만든 사태로 인하여 변화되게 된다. 군 내부 및 한국의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기존 합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존재해왔고, 시간적으로 한국의 준비가 미흡하던 상황에서,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위협이 실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한국민은 물론 미국에게도 입증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도록 예정된 2012년의 경우 한국의 총선(4월)과 대선(12월), 미국의 대선(11월)이 계획되어 있고,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할 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중국과 러시아도 정치지도자의 교체가 계획되어 정치 및 안보적으로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2007년 합의 당시에는 앞으로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이고, 북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남북간의 협력관계가 제도화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한미 양국은 2012년 정도에 한미연합사령부

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 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사항으로서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내부적 불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핵위협이 경우 북한은 2006년 10월의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2011년 6월 국회국방위 답변에서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한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방식을 사용하여 대량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였다고 공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핵공격을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여 억제하는 개념인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북한의 경우 만성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무리한 3대 세습체제 추진으로 인하여 언제 어떤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의 조약에서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다. 북한이 어떤 요인으로든 갑자기 붕괴되었을 경우 북한의 연착륙을 지원하거나 통일로 연결되도록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최소한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하면서도 적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일의 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북한이 불안해질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

2) 당시 정책입안자들을 미국이 전작권 환수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예상외로 미국은 이를 즉각 수용하였다. 이는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철수를 결의하자 미국이 수빅灣과 클라크 기지로부터 해공군 전원을 철수한 사례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미국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주둔국의 정책변화나 군대주둔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정책전환 및 군대 철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2년으로부터 2015년으로 조정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존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핵개발과 소형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한번 연기한 것을 반복하는 데 따르는 체면의 손상이나 추가적인 부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는 안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득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합의대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수용해야하는 측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과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거 한국은 경제건설에 집중하느라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전략이었지만, 국력이 신장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국토는 당연히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켜야 한다. 자국의 군대를 타국 지휘관의 예하에 귀속시켜 둔 상태에서는 국민적 자존심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한국군 스스로 작전계획을 발전시킨 후 연습을 실시하는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작전계획의 작성과 연습을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은 따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

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2008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을지-프리덤 가디언”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보와 군수, 군사이론 측면에서도 한국군의 책임성과 자체 충족성이 계속하여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요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하여 합의된 것으로 이것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인 2011년 6월에 한번 연기하였기 때문에 재연기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재연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부담을 요구할 지도 알 수 없고, 동맹관계에서 빚을 지는 입장일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다소 빠르거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는 있더라도 영원히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사령부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다소의 불안이 있더라도 이왕 합의된 것이니 이행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험을 보완할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등으로 어떤 상황이 충족되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 충족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하여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위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지니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유사시 지휘단일화(unity of command)의 원칙(한국군에서는 “지휘통일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휘단일화”로 사용하고자 한다)을 보장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 작전계획과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군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supporting) 하도록 되어 있는 미군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대체수단이 없게 된다. 다른 국가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미군의 방침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지휘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미군이 금방 작전에 투입되거나 한국군의 작전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미군의 참여 의지와 사명감을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지니는 실질적인 문제점은 유사시 미 증원군의 파견 가능성과 그 강도의 저하이다. 전쟁에 대한 개입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맹에 의한 공약(commitment)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그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할 경우에는 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승리를 위한 책임을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즉각적 개입과 증원병력 파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명시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미군사령관은 그의 책임완수를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도록 미군의 상급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 증원군의 참여 가능성과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한반도의 전쟁억제나 국지도발 억제태세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침략이나 도발을 감행할 경우 성공하지 못하거나 예상되는 이익보다 더욱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하는데, 한국군만의 전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1년 10월 제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 회(SCM)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발전시키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효과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전·평시 연결이 곤란해져서 초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군 스스로 처리해야 할 위기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위기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필요한 협조를 시행하는 것도 유기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한미 양국군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이라는 명칭으로 연합 위기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교리 발전, 연합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남겨둔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유엔군사령부가 별도로 분리되게 되는데, 이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이 애매해지고, 임무수행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휴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가 어떤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에 어떤 병력을 어떤 권한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애매해진다.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분리될 경우 한국군은 유사시 국제적 지원을 수용하거나 일본의 후방기지를 사용하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책임 및 증원 정도 약화에 따른 전력증강의 부담이다. 한반도의 방어를 주도하려면 한국은 무기와 장비를 상당할 정도로 보강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보 및 군수분야에 있어서도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국방비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되지 않을 경우 목표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승리 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관한 정책 방향

2015년 12월 1일 예정된 것은 전시 작통제권이라는 권한만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온 한미 양국의 단일사령부가 해체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작전권”이나 “작통제권” 환수라는 약어나 군사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미군이 행사하던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간단한 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는 전시 작통제권 환수라는 애매한 용어 대신에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그 득실을 신중하게 비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애매한 용어를 통하여 그것의 핵심적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학계나 언론에서부터 2015년 12월 1일부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군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군

사적 위험과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바와 앞으로 노력할 바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2015년 12월 1일까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고, 서울은 물론 청와대에 대한 포격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갖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북핵문제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문제의 해결이 수년 동안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수년 내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2007년 합의했을 당시보다 북한핵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고,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북한이 핵을 비행기로 운반한다고 할 경우 한국군의 방공능력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만, 800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통하여 공격할 경우 한국은 그것을 요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한미 양국은 그 동안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도입하고 “한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국의 핵보복력을 활용한다는 개념이지만, 이보다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이 더욱 신뢰성이 클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결정이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감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점이 컸다는 점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와 상관없이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고양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제반 사태에 관한 한미 협

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군대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사례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작전계획의 발전이나 이에 근거한 다양한 연습, 위기관리에서의 조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대미 일방적 외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솔직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합의하여 한번 연기한 것을 또다시 거론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워할 일도 아닐 수 있다. 미군 대부분이 반대하였음에도 럽스펠드 장관이 결단을 내려 최초 합의가 가능한 측면이 존재하듯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에 모든 미군이 찬성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북한핵에 접근하거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 확보 차원에서는 미국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독재국가로 분류한 미얀마의 관계도 개선하는 등 중국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한미 양국의 이해가 쉽게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의해보지도 않은 채 미국의 입장을 지레 짐작하여 합의 재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핵에 대한 스스로의 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분단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현황과 핵무기의 위협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대안을 식별하고, 정책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며, 그 중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토론과 연구의 실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북한핵 대응에 필요한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력증강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라크나 시리아의 핵발전시설을 공격한 사례를 참고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안보의 절대성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의 득과 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막다른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대신에 미리미리 검토하여 결론을 내린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대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은 차기 정권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출범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독일통일 시 주독 미군이 전쟁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면을 전개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미동맹에 관한 사항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는 물론이고, 통일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끝>

### 〈정책제안〉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실제적 내용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의 득실에 대한 냉정한 검토, 그의 시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건의 설정, 그 조건의 달성 여부 평가, 그리고 시기의 적절성 판단
-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전력 보완 노력
  - 조기경보 및 전략적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 탄약 등을 비롯한 전쟁지속능력 보장
  - 정밀타격 능력 보강
- √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군의 조치 필요 사항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의 추진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시기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 √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보강에 대한 검토 및 대미 협의
  -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권한/책임
  - 유엔군사령부의 병력요구에 대한 부응하는 책임
  - 유사시 국제적 지원 수용 방안
- √ 대미 자주외교 강화 및 주변국 외교 정책의 다변화
-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 논의 강화